

‘쌍특검 법안’ 여당 표결 불참 속 본회의 통과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민주·정의당 등 야당 주도
국힘 ‘총선용 악법’ 규정
대통령 거부권 건의키로
여야 극한 대치 정국 경색

‘쌍특검법안’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만이다.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명의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

일부 의원들이 남아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원들만 180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여사 및 가족의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

이다.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정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방송3법 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

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몰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쌍특검법을 내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공세로 간주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지권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쌍특검법을 중심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문영훈·김광진 광주시 행정·경제부시장 이·퇴임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직에 재임하며 국회의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정부비서관 등의 경험을 살려 광주의 주요 현안을 빠른 속도감으로 풀어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6개월간의 소회를 간략히 밝혔다.

김 부시장은 “민선 8기 광주시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만들었고 가까운 미래에 열매를 맺게 될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큰 광주, 기회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또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가자 한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문화경제부시장직에 재임하며 국회의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청와대 정부비서관 등의 경험을 살려 광주의 주요 현안을 빠른 속도감으로 풀어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용섭 전 시장 시절인 민선 7기부터 행정부시장을 맡아온 문 부시장은 강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유임돼 민선 8기 중 1년 6개월간의 광주에서 보낸 뒤 행안부로 복귀한다.

문 부시장은 “크고 굵직한 현안들을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광주를 돕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시장은 1967년 장흥 출신으로 부산동초등학교, 장흥중학교, 장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로 행정안전부 계열 부서에서 재직했다. 문 부시장은 행안부 소속 일반직고위 공무원으로, 이임사항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년 1월초 광주시 행정부시장 인사가 예정돼 있어 이 임식을 29일로 정한 상태다. 노병하 기자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과 성태운 신임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뉴스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운

안보실장 장호진… 3실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현 정책실장이 이동한다. 정책실장으로는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부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태운 신임 정책실장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

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을 공식화하며 “제 소임을 다했다 생각해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께서 그제께(26일) 승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실·국·과장급 73명 인사 단행

직무역량·도정 기여도 반영

전남도는 2024년 1월2일자로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52명으로 총 73명이다.

승진인사는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발했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배치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과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전남도는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는 내년 1월22일까지 실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사명단 17면 최창지 기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31일 폐업… 새 운영자 못 찾아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이 새로운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폐업 결정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제2요양병원은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폐업한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지난 2013년 개원과 동시에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맡아왔다. 지난 7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남대병원은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혔다.

전체 196병상은 지난 여름부터 서서히

전원조치돼 현재 남아있는 입원자는 없다. 폐업 이후 이곳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이다. 연면적 6347㎡ 부지는 노유자시설 부지로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과거 요양병원 설립 당시에는 노유자시설 부지에도 의료시설 신축이 가능해 제2요양병원이 지어질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 복안을 차츰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옛 전방·일신방직 사전협상 마무리

휴먼스홀딩스 도시계획변경 완료 복합쇼핑몰·호텔 등 전략시설 유치

광주시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 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주)과 일신방직(주)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허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

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주거복합시설용지 등 사업성 확보시설 △역사문화공원(공장건축물 보존)·학교·공공용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변경한다.

광주시는 공공기여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54.45% 수준인 5899억원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및 시민체감사업 등에 사용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상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사업자 측과 11회에 걸친 협상회의, 마스터플랜 국제설계공모, 도시계획변경 전후 토지감정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등 일련의 협상절차를 진행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지난 2019년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이후 두 번째 사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민간이 수립한 개발 계획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협의 조정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사업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등 도시전략시설 유치, 근·현대 산업유산의 보존, 합리적인 계획이득 환수 등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시민 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이후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